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대통령 비서실·경호실 2006년 11월 16일)

1. 현재소장 후보자 전효숙 파문! 책임의 미덕이 아쉽다

- ▶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2. 심각한 장·차관 단명! 청와대 인사시스템 바꿔야 한다

- ▶ 재직기간 1년 미만 장·차관이 무려 35명(38.5%)
- ▶ 장·차관 평균 재임기간 각각 1년 2개월, 1년 3개월

3. 청와대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 ▶ 징계받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지속적 증가
- ▶ 대통령 경호실,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65% 차지

4.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홍보관리 미숙이 국론분열을 불러왔다

5. 국가안보상황 발생! 군사위성, 아리랑2호는 무용지물

- ▶ 세계가 북한핵실험장소 찾고 있을 때 아리랑2호는 남한지역을 찍고 있었다
- ▶ 국가자원의 최대 활용으로 안보대처미숙 피해야

6. 경호실 직원 조기퇴직문제, 민간경호단체와의 교류로 해결해야

- ▶ 경호실 직원 49명 퇴직, 취업은 4명(8.2%)

헌재소장 후보자 전효숙 파문! 책임의 미덕이 아쉽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 **현 황**

- 지난 몇 달 동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정국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음. 대통령이 비서실장 명의로 유감표명을 하였고,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수장 자리의 공백을 가져오는 국정혼란 상태를 초래하였음. 그리고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전효숙 후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
-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그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자리하고 있음.
-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하고, 이어 헌법규정에 따른 자격논란이 일면서 결정적으로 파문이 커졌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금만 신중하게 꼼꼼히 일을 진행하였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을 발생시킨 격이 되었음.

□ **문 제 점 & 질 의**

- 상황이 이러한데도 비서실에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는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 민간기업이라면 관련자는 당연히 해고하고도 남을 사안임.
- 본 의원은 인사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하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심각한 장·차관 단명! 청와대 인사시스템 바뀌야 한다

**재직기간 1년 미만 장·차관이 무려 35명(38.5%)
장·차관 평균 재직기간 각각 1년 2개월, 1년 3개월**

□ 현 황

- 참여정부는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여 인사추천창구를 일원화하여, 고위직에 대한 인사기능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였음.
- 인사수석실에서는 인사후보자에 대해 적격성을 평가를 한 후, 민정수석실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의 정밀검증결과와 인사추천회의의 심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여 결정하게 됨. 즉 체계적인 인사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가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임.

□ 문 제 점 & 질 의

- 참여정부 출범(2003년 2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체계적인 인사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차관은 총 91명(장관 44명, 차관 47명)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임명된 장·차관 91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한 것으로 나타남. ▲장관의 경우 1년 2개월 ▲차관의 경우 1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재임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장·차관이 35명(38.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와대 비서실에 인사수석실까지 신설하고, 나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대통령께 추천한 장·차관의 재직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본 의원은 비서실의 장·차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나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표-1> 참여정부 장차관의 재임 현황

구 분	참여정부 장차관 재임 기간		
장차관 수	91명	1년 이상 재임	56명(61.5%)
		1년 미만 재임	35명(38.5%)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	1년 2개월		
차관의 평균 재임기간	1년 3개월		

(자료출처 : 2006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증과 평가를 거쳐서 적어도 대통령이 인사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장계 받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지속적 증가
대통령 경호실,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65% 차지

□ 문제점 & 질의

- 최근 청와대 기강이 우려되고 있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살인을 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경호실 고위간부는 거액뇌물을 받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음.

1. 징계 받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지속적 증가

- 최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연도별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03년도 10명 ▲2004년도 12명 ▲2005년도 1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06년도는 9월 현재, 무려 11명에 이르고 있는바(이 징계내역에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 등 외부징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대통령 경호실,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65% 차지

- 아울러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약 4년간 징계를 받은 20명 중 ‘음주운전’이 무려 13명으로, 징계 사유의 65%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 경호실법 제3조’는 경호의 대상을 ▲대통령과 가족 ▲전직 대통령 ▲국민 등 요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들 인사에 대해서 경호(警護 :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경호실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경호원의 자질’과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여겨짐.

〈표-1〉 대통령 경호실 직원의 징계 현황

구 분	징계 받은 직원	징계 받은 직원 중 그 사유가 '음주운전'인 직원
2003년	2명	13명(65%)
2004년	4명	
2005년	8명	
2006년 9월 현재	6명	
합 계	20명	

(자료출처 : 2006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가원수가 근무하는 기관의 기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행정부처 공무원에 대해 기강강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정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실이 직원에 대한 기강을 확고히 하고, 신상필벌의 자세로 대통령을 빈틈없이 보좌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홍보관리 미숙이 국론분열을 불러왔다

□ 문제점 & 질 의

- 정부는 지난 8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국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음.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출신, 경찰총수, 지식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가 대규모로 잇달아 일어났음.
-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정보와 위기관리를 포함한 전시작전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조기구를 통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한미안보협의화.군사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동맹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현재,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87년인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논의가 이루어진지 25년만인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것임,
- 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지난 8월 이전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임. 그러다가 지난 8월 정부가 전시작통권 전환 로드맵을 일부 공개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켰음.
- 이는 2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전시작통권 환수가 지난 8월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의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발각 뒤집힌 바, 본 의원은 그 이유로 ‘홍보 부족’을 언급하고자 함.
-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20년이 넘게 진행해 오면서, 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임.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처럼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전시작통권 환수논란은 일차적으로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임.

- 전시작통권의 환수는 ‘시기의 문제’이지 환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홍보부족으로 문제가 상당히 커졌음. 안보라인 관계자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안보상황 발생! 군사위성 아리랑2호는 무용지물
세계가 북한핵실험장소 찾고 있을 때
아리랑2호는 남한지역을 찍고 있었다

□ 문제점 & 질의

- 10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선언’ 후 합동참모본부는 3일 밤 전군에 정보감시와 작전대비 태세 강화지시를 내리고, 금강·백두 정찰기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활동에 들어갔음.
-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예측은 적중했고, 한국은 계속 특이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반복하였음.
-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 계획을 선언(3일)할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과 에릭 에델만 미 국방차관은 5일 회동 직후 “북한이 이번 주말 첫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음. 그리고 당일 주일 미군 소속 핵 물질 조사용 정찰기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공개됐음. 북한이 핵실험 성공 발표를 보도한 것은 9일 오전 11시 48분,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8일 밤이었음.
- 그러나 정작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을 강행할 때까지 대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외교안보관계자들은 전혀 그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도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은 ‘특이 징후 없다’고 국회에 보고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음.
- 그러나, 한반도 상공을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통과하는 한국의 군사위성인 아리랑2호를 십분 활용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임.
-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안보실장이 국가안보 및 재난 시에 최우선 이용하게 되어있는 아리랑2호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임.

- 안보실장은 군사위성인 아리랑2호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고 있었다면 활용을 왜 하지 않았는지 밝히기 바람.

□ 참고 사항

- ‘아리랑 2호’는 현재 검·보정 중에 있지만, 해상도가 흑백 1m인 고해상도카메라(MSC:Multi Spectral Camera)를 장착한 위성이므로 촬영한 영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실제 지난 9월 28일 ‘아리랑 2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음.
- 그리고 1초당 약 7Km가 넘는 속도로 한반도 남동쪽에서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로 폭 15Km 범위로 촬영하기 때문에 2분 정도면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음.
- 2006년 7월 28일 발사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아리랑 2호’는 상용위성이면서도 국가안보 및 재난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사된 위성이므로, 북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황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공표한 3일부터 핵실험 이후까지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어야 함.
- 10월 3일 이후 외국 언론에서 조차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아리랑 2호’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 핵실험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북한 지역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아리랑 2호’는 10월 4일, 9일, 14일은 한반도 중심상공을 통과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한 10월 9일 오전 10:35경의 직후인 오전 11시 경에 한반도 중심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쪽을 촬영하고 있었음.

□ 참고 자료

- 총 사업비 : 2,663억원(정부 2,445억원, 민간 188억원)

- 사업 기간 : 1999.12 ~ 2006.7.28(발사일), 총 6년 8개월
- 참여부처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총괄기관 : 항우연)
- 제 원 : 해상도(흑백 1m, 칼라 4m) - 고해상도카메라 탑재
수명(3년), 고도(685Km), 무게 (800Kg)
- 임 무 : 국가안보, 재난·재해 등에 최우선 활용하며, 국내외 기업 등에 영상자료 판매(3년간 5,400만불 수익 예상)
- 위성성능 : 아리랑2호는 비정지궤도 위성 중 저궤도 위성으로
685Km 상공에서 98분당 지구를 1회, 1일 14.5회 회전
하며, 남동→북서 방향으로 1일 2회(오전 11경,
오후 11경) 한반도 상공을 통과 함. 비와 구름이 많으면
촬영하지 못함.

경호실 직원 49명 퇴직, 취업은 4명(8.2%)

□ 문제점 & 질의

- 현재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 퇴직하고 있어, 타 부처 일반 공무원보다 10여년 정도 조기퇴직하고 있음.
- 이는 특정직 경호요원의 정년이 일반직 보다 5~10년 정도 짧은 50~55세로 규정되어 있고,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퇴직이 불가피한 실정임.

*참고사항 : 계급정년(階級停年)이란 한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하거나 퇴역하도록 정한 기간으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5급 → 4급의 계급정년은 14년 ▲4급 → 3급의 계급정년은 10년임.

-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국민의 정부의 경우, 퇴직자 57명 중 30명(57.7%)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퇴직자 49명 중 단 4명(8.2%)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표-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호실 5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 현황

구분	연도	5급 이상 퇴직자 현황		5급 이상 퇴직자 취업 현황	
		인원(명)	합계(명)	인원(명)	계(명)
국민의 정부	1998년	21	57	14	30(57.7%)
	1999년	11		3	
	2000년	12		6	
	2001년	7		4	
	2002년	6		3	
참여 정부	2003년	25	49	1	4(8.2%)
	2004년	7		2	
	2005년	3		·	
	2006년	14		1	

(자료출처 : 2006년 대통령 경호실 국정감사 제출자료)

- 특히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취업자 수는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경호실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공로연수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회적응기간 부여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영업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정년 도래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유도 등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대학 경호학 분야 교수요원, 공·사기업체 안전 분야 등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4명 취업'이라는 것은 대책이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통령 경호실은 직원만 500여명이고, 연간 5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내 최고의 경호전문기관으로, 경호전문가가 조기 퇴직하여 그 전문경호업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본 의원은 경호실 직원의 조기퇴직문제는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여겨짐.
- 직원의 사기는 완벽한 대통령 경호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경호실은 뚜렷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6년 6월 현재, 신변보호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만 6,000명이 넘고 있음. 전국 대학 경호학과 인원을 제외하고도,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포함한 경비업 종사자는 12만 6천명에 이르고 있고 종사인원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민간경비단체와 경호실과는 전혀 교류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의원은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경호실과 민간경비단체의 교류를 추진·확대방안을 마련해, 민간경비단체는 선진경호기법을 전수 받으면서 경호실 직원의 조기퇴직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